

與 “특검 조사 거부”尹, 구속만이 답... 강제 수사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내란 특별검사팀 대면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법꾸라지 윤석열, 구속밖에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꾸라지처럼 온갖 핑계를 부리다 마치못해 특검에 출석했다. 그러나 국민을 기만한 핑수 출석이고 또 하나의 쇼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조사실 입실조차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버티고 있다며 ‘이는 출석 거부와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꾸라지 윤석열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구속만 피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석한 것”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와 양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는 구속만이 답”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히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특검은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단호하게 나설 때”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오전에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오늘의 특검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의 출발점일 뿐이다. 특검은 내란 혐의와 권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尹, 조사자 교체 요구하며 오후 조사 거부 “구속 피하고 수사 방해하기 위해 출석해” 정청래 “긴급체포해서 윤석열 감옥으로”

형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

한 보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대표 예비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폭풍처럼 몰아치고 강력하게 다그치고 압박조사해야 한다”며

“불 때까지 물어야 한다. 긴급체포해서 윤석열을 감옥으로”라고 적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꾸라지, 법기술자도 조은석 특검 앞에 굴복했다”며 “전직 대통령(이자) 검찰총장답게 법꾸라지, 법기술자, 잔재주 부리지 말기를 국민은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조사를 거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오후 4시50분경 조사가 재개됐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신속한 검찰 개혁을 위한 광주시민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검찰 개혁 4대 법안, 9월 내 반드시 완결” 신속한 검찰개혁 위한 토크콘서트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광주를 찾아 “당대표가 된다면 검찰 개혁 4대 법안을 9월 내 반드시 완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27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신속한 검찰개혁을 위한 광주시민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정치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며 운을 뗐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검사들과 대화에 나서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명문화돼 있던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했지만, 돌아온 것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망신주거였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 혁신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공수처를 도입해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윤석열의 배신으로 개혁의 동력을 잃고 정치 검찰 정권으로 이어졌다”고도 밝혔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기회는 넘칠 만큼 주어졌지만 개혁은커녕 3년간 나라를 망친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이제 시민의 힘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9월까지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법과 제도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반

드시 우리 국민의 추서 법상에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의 웃음꽃이 만발하도록 하겠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박 후보를 거듭해서 지지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헌정사상 첫 사례였던 안동환 검사 탄핵 당시 숨은 설계자는 박 후보다. 검찰 개혁을 정말로 끝낼 당사자”라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을 광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걸을 지켜줬지만 이재명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걸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 먹었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후보는 “월임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 내겠다. 이재명-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에 국민과 당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 집중 ▲완벽한 내란 종식 ▲검찰·사법·언론 개혁 완수 ▲내년 지방선거 압승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정현 기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 가동할 임시 지도부가 다음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송인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힘, 내주 새 비대위 구성... 송인석 비대위원장 겸직 무개 내달 1일 전국위 소집,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오는 30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송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당 의결기가 없는 상태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

이 지명할 수 있는데 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전국위를 소집하게 된 것이다.

원내 지도부는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당 지도부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여론 수렴 작업을 진행

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대위는 8월 개최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그렇다보니 2개월여 남짓인 데다가 실질적 권한도 없는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을 맞는 다음달 3일을 목표로 기자회견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첫 기자회견을 취임 100일 전후에 열어왔으나 관례를 깨고 시기를 대폭 앞당긴 데는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이번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검토... 소통 행보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예고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언론과도 예정에 없던 차담회를 갖는 등 소통 폭을 넓히고 있다.

취임 첫 기자회견을 조기에 열어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부각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형식과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구례고향사랑기부제란?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례군에 기부하고, 구례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이플도 가능해요

국민
기업

신한
하나은행

고향사랑e음 접속 및 가입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담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담례품 주문하기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담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